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국립공원도시 런던 첫선' 기념축제 연다

문화·관광 도심 잔존 농가주택, 보존·활용 '두 토끼 잡기'

산업·경제 창업가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에 임차료 등 보조
지역 스타트업 허브로 떠오른 코워킹 스페이스

사회·복지 "고령세입자 '곤란한 상황' 고려해 임대계약 유지"
이주민 도시정착 돕는 '어머니 사업', 시장 운영
'여성,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하반기 내 시행

행정·교육 재생산·사회·경제 분야 여성정의 실천전략 제시

환경·안전 폭염 대비 사회연결망 강화·취약지역 우선 개선

도시교통 인도주행 금지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 시작

도시계획·주택 '99년간 사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국립공원도시 런던 첫선’ 기념축제 연다

7월20~28일...옥상정원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이벤트

영국 런던시 / 환경·안전

지난 2017년부터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영국 런던시는 그간의 녹색화 성과를 처음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국립공원도시 축제(Natinoal Park City Festival)를 올 7월 말에 열 계획임. 여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숲·수변공간과 옥상정원 등 런던 곳곳의 자연 친화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민·관광객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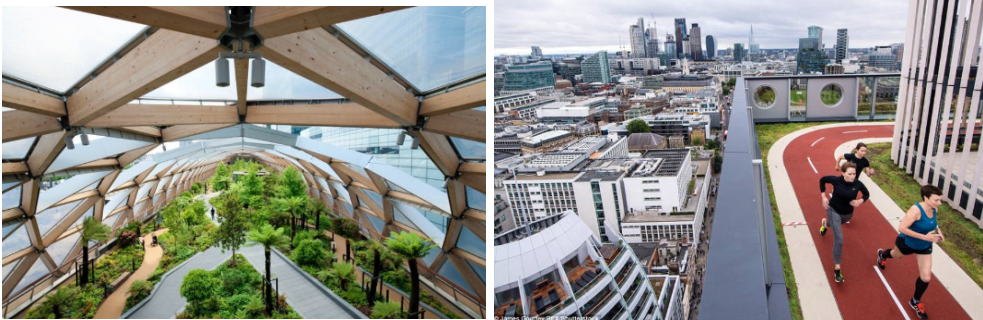
-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도시 조성 노력, 성과가 보이기 시작
 -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지난 2017년 런던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도시로 만들 계획을 발표(※ 415호 참조)
 -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대기오염 등에 대비
 -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절반을 녹색공간으로 변모시켜 모든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지난 3년간 재정을 투자해 17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 200여 곳의 녹색공간을 만들었음
- 국립공원도시 런던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축제를 기획
 - 2019년 7월 20~28일 국립공원도시 축제 개최
 - 런던 전역에서 다양한 이벤트·퍼포먼스·축제 등을 무료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
 - 런던에서 열리는 국가 최대의 무료 야외활동 축제가 될 예정

주요 축제

- 국립공원도시 스테이지 축제(National Park City Stage)
 - 국립극장(National Theatre)과 협력해 템즈강변 야외 스테이지에 축하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개최
 - 가족 뮤지컬 공연, 밤의 황제(Night Czar, ※ 409호 참조)와 함께하는 친환경 자전거 페달 돌리기 파티, 식물코스튬 행위예술 공연 등

○ 국립공원도시 옥상 축제(National Park City Rooftops)

- 세계적인 건축 축제 ‘Open House London’과 연계하여 런던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옥상정원과 내부 녹색공간을 무료로 방문
- 주요 대상 건축물은 커넬리 워프(Canary Wharf)의 크로스레일 플레이스(Cross-rail Place), 바비칸 센터 식물원(Barbican Conservatory), 소호(Soho)의 햄야드 호텔(Ham Yard Hotel)



[그림 1] 런던 건축물 내 옥상정원과 녹색공간

○ 국립공원도시 숲 축제(National Park City Forest)

- 런던의 문화 자치구라고 불리는 월담 포레스트(Waltham Forest)와 협력하여, 에핑 숲(Epping Forest) 속에 독특한 오디오 설치 미술 작업을 진행할 계획
- 숲속 생태계의 살아있는 소리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음악적 음률을 나타내는 예술 작품으로, 실제 숲속의 야생 동식물과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

○ 국립공원도시 야생 축제(National Park City Wildlife)

- 런던의 야생동물·자연환경 사진 콘테스트 겸 전시 이벤트로, 런던 야생동물재단(London Wildlife Trust)과 함께 개최
- 심사는 대중에게 유명한 탐험가 베어 그릴스(Bear Grylls)와 다수의 상을 받은 유명 야생동물 사진 예술가(wildlife photographer) 샘 홉슨(Sam Hobson)이 진행

○ 국립공원도시 물빛 축제(National Park City Splash)

- 런던의 최초 야외 수영과 카약 스포츠 이벤트로 축제의 마지막 주말에 열릴 계획
- 자유 수영은 물론 카약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패들링 활동 등 도심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야외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할 계획



[그림 2] 야외 물놀이 이미지

○ 세계적인 공원도시를 지향하는 런던의 목표

- 장기간의 지속가능성을 가진 녹색성장 도시이자 시민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잘 교류할 수 있는 도시
- 도시의 녹지 네트워크가 잘 보전되며, 도시 내 건물과 공공장소가 벽돌·콘크리트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자연친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도시
- 모든 시민이 높은 수준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깨끗한 공기와 수변 공간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green-spaces-and-biodiversity/green-infrastructure>

<https://nationalparkcity.london.gov.uk/events/13f9b280-3d47-4192-a65a-776406f86405>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green-spaces-and-biodiversity/london-national-park-city>

정 기 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도심 잔존 농가주택, 보존·활용 ‘두 토끼 잡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문화·관광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최근 도심 내 잔존하는 농가주택 ‘마시아’(Masia)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한편으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주민센터·노인회관·어린이집 등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일상의 영역에서 공유시킴

배경

- 마시아는 이베리아반도 동쪽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적 농가주택
 - 로마시대 빌라(Villa, 농장경영을 위해 교외에 지어졌던 상류층 전원주택)에서 기원하며, 수 세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구축된 토속건축
- 산업화시대 바르셀로나시의 영역 확장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로 편입
 - 현재의 바르셀로나를 구성하는 10개 구(Distrito) 중 8개가 20세기 중반 이후 편입 - 농가주택인 마시아가 오늘날 바르셀로나 시내에 잔존하는 이유
- 개발에 따른 마시아 소멸 가속화
 - 2009년 기준 497개 소멸, 106개 잔존
- 카탈루냐 민족의식의 성장과 지역문화유산에 관한 관심확대
 - 마시아의 학문적 이론화는 지역정치세력이 성장하고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근대적 의미의 지역문화 연구단체(카탈루냐 답사협회(Centre Excursionista de Catalunya), 1890년 설립)가 등장한 이후인 20세기 초에 처음 시도
 - 카탈루냐 독립운동 움직임이 강해진 2010년대 이후 체계적 보존 열기 확대

주요 내용

- 시내 잔존 마시아를 시 관리 문화유산으로 등록, 등급 부여 후 목록화
 -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보수할 때는 시청 문화재부의 권고를 수렴해야 해당 구청의 허가 취득이 가능
 - 농촌이었던 과거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적 가치(주 입면, 내력벽, 지붕기와, 건물의 연혁이 담긴 내외부의 돌 등)를 고려하여 원형에 건취 이질적인 증축 영역의 제거나 적합한 재료·구법(構法) 등을 권고

- 시의원총회(El Plenario del Consejo Municipal)를 거쳐 도시계획 승인과 예산확보
 - 마시아 단독건물만이 아닌 부속된 땅(사유지 포함)까지를 통합적 도시계획(Plan Urbanístico Integral)의 대상으로 접근
- 각 구의 주민연합회 의견을 거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공적용도 결정
 - 마시아 본 건물은 학교·주민센터·노인정·도서관 등으로, 부속 대지는 학생들의 체험형 농장 등으로 활용
 - 박물관 등의 전시목적 기능보다 학교·놀이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의 일상영역에서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복원과 유지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



[그림 1] 도시농업 학교로 사용될 마시아 Can Valent



[그림 2]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될 마시아 Can Miralletes

○ 학술행사 지원으로 해당 사업의 의미 공론화

- 최근 카탈루냐 농업문화 연구재단(Institució Catalana d'Estudis Agraris) 주관으로 '카탈루냐 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마시아 콘퍼런스'를 개최
 - 2019년 3월 13~15일 개최하였으며, 도심 내 마시아 재생사례를 담당 건축가들이 직접 소개
 - 마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는 '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기후변화, 도시재생, 지역개발, 관광 등)로 논의를 확장하여 마시아의 사회적 의미 확대
 - 마시아 관련 법규의 통합과 간소화 등 개정 공론화 유도

Ayuntament de Barcelona. (2009). Masies de Barcelona, Barcelona : Anglo editorial

<http://ajuntament.barcelona.cat/arqueologiabarcelona/agenda/2n-congres-del-mon-de-la-masia-passat-present-i-futur-del-territori-rural-catala/>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80604/443954279512/masia-can-valent-porta-nou-barris.html>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70902/43988437278/barcelona-rehabilitara-la-masia-can-miralletes-de-sant-marti-para-convertirla-en-ludoteca.html>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160323/40636891442/masia-barcelona-sant-andreu-casas-alto-standing.html>

<https://www.elperiodico.cat/ca/sant-andreu/20140520/una-masia-del-xvii-acull-una-escola-publica-3278328>

<https://www.elperiodico.com/es/distritos/20120926/de-gran-masia-senorial-a-centro-civico-2212366>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es/nou-barris-recupera-la-masia-de-can-valent-y-el-campo-de-la-dam-m-para-equipamientos-nuevos_808278.html

박 정 수 통신원, urbanmasia@gmail.com

창업가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에 임차료 등 보조

일본 효고県 / 산업·경제

일본 효고県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 창출이 가능한 창업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에게 임차료, 사무기기 구입비, 통신회선 사용료, 인건비 등의 경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

개요

-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창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코워킹 스페이스 보조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혁신 창출이 가능한 창업가 등의 정착·집적을 촉진하는 데 힘씀
 - 다음 세대 창업가 배출에 필요한 ‘인큐베이션 기능을 지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 개설을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개설 지원 사업

- 창업가를 지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임차료·사무기기 구입비 등 보조
 - 보조대상 사업자는 현 내에서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자로 3년 이상의 사업계획서와 해당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창업가의 사업 성장·확대를 지원하는 계획을 작성한 자
 - 같은 지역 내에서 이미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가 사업을 확대·이전할 때도 보조대상
 - 사업의 확대 없는 단순 이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 코워킹 스페이스 이외의 사업과 병행하고, 공간 구분을 할 수 없는 사업자는 매출액 비중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
- 건물 개수비, 임차료, 사무기기 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
 - 건물 개수비: 빈집으로 남아있던 건물을 활용 시 개수비용을 보조
 - ① 빈집으로 남아있던 기간 6개월 이상, ② 지어진 지 20년 이상, ③ 배관 설비를 10년 이상 수리하지 않아 수선이 필요한 건물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임차료: 코워킹 스페이스와 생활공간이 하나의 건물에 있을 때는 오로지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의 임차료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통신회선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외에, 전용회선, 임대서버, 도메인 이용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등 사업에 필요한 일련의 통신회선 경비 포함
- 인건비: 고도 IT 인재 외에 ① 정보처리기술자시험 중 고도시험 및 응용정보기술자시험 합격자, ② 민간기업에서 ①과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자, ③ ① 이상의 기술(개발 실적)을 가진 자도 보조대상

[표 1] 효고현 코워킹 스페이스 보조금

대상 경비	보조 기간	소프트웨어형	하드웨어형
건물 개수비	개설 시	100만 엔(1,100만 원) * 빈집 활용 시 100만 엔 추가	100만 엔(1,100만 원) * 빈집 활용 시 100만 엔 추가
사무기기 구입비	개설 시	50만 엔(550만 원)	50만 엔(550만 원)
임차료	3년간	60만 엔(660만 원)/년	-
통신회선 사용료	3년간	60만 엔(660만 원)/년	-
인건비	3년간	100만 엔(1,100만 원)/1인 1년 * 고도 IT 인재	-
3년간 보조 상한액		810만 엔(8,910만 원) * 빈집 활용 시 910만 엔(1억 10만 원)	550만 엔(6,050만 원) * 빈집 활용 시 650만 엔(7,150만 원)
대상지역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한신 남쪽 지역 이외	현 전역
보조율		1/2(현) * 인건비는 정액	1/2(현 1/4, 시정(市町) 1/4) * 인건비 정액(현, 시정 각각 50%)

- 보조대상 사업자의 이름과 사업 개요를 웹 사이트 등에 널리 소개
 - 보조대상 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 확대에 힘써야 함
 - 또한, 보조금 지급 후 5년간을 한도로 현의 요청에 따라 사업성과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대상 사업자가 보조 기간 중에 사업을 중지·폐지하면 현정부는 보조금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https://web.pref.hyogo.lg.jp/sr10/koudoit.html>

https://web.pref.hyogo.lg.jp/press/20181107_1378.html

<https://web.pref.hyogo.lg.jp/sr10/documents/yokohard.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지역 스타트업 허브로 떠오른 코워킹 스페이스

독일 하노버시 / 산업·경제

독일 하노버시의 하펜(Hafen)은 지역 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프로젝트임. 우수한 도심 접근성, 매주 창업·창작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이벤트 진행, 다수의 공공기관·민간업체와 파트너십 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1,300명 회원을 모집하며 지역 스타트업의 허브 기능을 하는 크리에이티브 센터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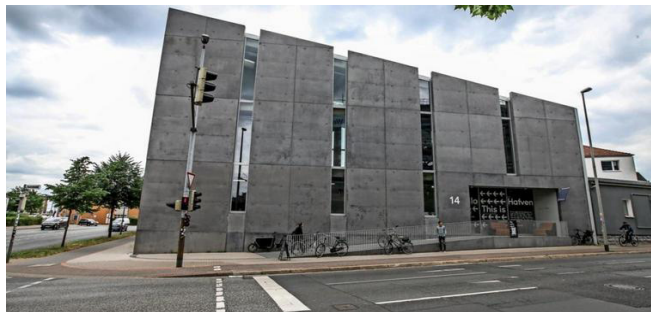
배경

- 다수가 공유하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이 프로젝트의 취지
 - 코워킹 스페이스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트렌디한 업무환경 방식
 - 영구적인 업무환경과 조직 비효율성의 대체방안으로 각광
- 프로젝트 콘셉트: 책상, 의자, 그리고 인터넷
 -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자는 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활동
 - 단순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구성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주요 내용

-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 허브(Hub) 역할
 - 하노버 노르트슈타트(Nordstadt)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
 - 인근에 하노버대학교(Leibniz University Hannover)도 있어 허브 역할에 최적
 - 연면적 2,200㎡ 규모의 크리에이티브센터
 - 2016년 하반기 설립 이후 약 1,300명의 회원 확보, 지역 커뮤니티 형성
 - 매주 워크숍과 커뮤니티 모임 등 이벤트 진행(현재까지 200회 이상 진행)
 -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벤트에서 정보공유 등의 교류활동, 창업·창작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음
 - 하노버시와 니더작센주 내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이용자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

- 업무·창작 공간은 물론 스타트업 지원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업무활동 관련시설과 지원활동
 - 코워킹 공간: 창의적인 프리랜서 혹은 소규모 조직을 위한 업무공간
 - 미팅 공간: 업무 및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를 위한 영역
 - 창작활동 관련시설과 지원활동
 -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금속, 목재, 섬유 등의 제품제작이 가능한 공방
 - 팹랩(FabLab): 레이저커팅기, 3D 프린터, CNC 밀링머신 등을 보유한 제작 실험실
 - 스타트업 관련시설과 지원활동
 - 인큐베이터: 젊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공유, 마케팅 기회 제공
 - 아이디어 스페이스(Design Thinking): 스타트업이 미래시장과 고객 특성을 예측·준비할 수 있는 창의성 증진의 공간
 - 이벤트 스페이스(Bar Camp): 강의, 토론, 워크숍 등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
 - 기타시설
 - Cafve: 카페시설이자 강의와 행사도 가능한 다목적 공간
 - Display: 대규모 창작물 설치가 가능한 전시공간(중정의 야외공간 포함)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우편함과 주차공간



[그림 1] 독일 하노버 코워킹 스페이스 하펜

- 이용자는 수요와 활동범위에 따라 비용 지불 차등화
 - 커뮤니티 이용자(1개월 기준)
 - 월 10유로(13,000원, 1인 기준) 비용 지불
 - 커뮤니티 포털 및 이벤트 참가 가능
 - 업무활동 관련시설 1일 이용 가능(미팅 공간 1시간)
 - 창작활동 관련시설 1시간 이용 가능

- 레지던스 이용자(1개월 기준)
 - 월 90유로(117,000원, 1인 기준) 비용 지불
 - 커뮤니티 포털 및 이벤트 참가 가능
 - 업무활동 관련시설 무제한 이용 가능(미팅 공간 10시간)
 - 창작활동 관련시설 20시간 이용 가능
- 오피스 이용자(1개월 기준)
 - 월 200유로(260,000원, 1인 기준) 비용 지불
 - 기본조건은 레지던스 이용자와 동일
 - 해당 이용자 전용 워킹스페이스 영역 제공



[그림 2] 하펜 업무활동 관련시설과 활동



[그림 3] 하펜 창작활동 관련시설과 활동

<https://hafven.de/>

<https://www.neuepresse.de/Hannover/Meine-Stadt/Staatspreis-fuer-Hafven>

<https://www.haz.de/Hannover/Aus-der-Stadt/Uebersicht/Kreativzentrum-Hafven-eroeffnet-in-der-Nordstadt>

이 희 재 통신원, h.lee@baek-architekten.com

“고령세입자 ‘곤란한 상황’ 고려해 임대계약 유지”

독일 베를린시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최근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제기한 ‘자가사용을 위한 임대계약 해지 소송’에 관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이 민법상의 ‘곤란한 상황’(Härte)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함. 이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편법으로 살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배경

-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사례 발생
 - 베를린 표준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이미 체결된 임대계약기간(일반적으로 무기한) 중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릴 수 없음
 -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 집주인은 주로 편법을 동원해 세입자를 내쫓음
 - 임대주택을 자가사용하겠다는 합법적인 이유로 기존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해지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로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다음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월세를 올려받음
 - 주택을 매각하여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식도 사용
- 최근 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의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이 기각
 - 1997년부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온 두 명의 세입자(현재 각각 87세, 84세)는 2015년 주택을 새로 구매한 임대인에게 자가사용을 위한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임대인은 베를린 미테 지역법원에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거절
 - 원고는 항소했지만, 최근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재차 기각 판결

주요 내용

- 법원은 계약해지 시 고령의 세입자가 독일 민법상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항변을 인정
 - 피고인인 세입자는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된 점, 현재 주택과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점, 소득이 더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엔 재산이 부족한 점을 사유로 항변

-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 상황에서 주택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의 건강상태와 별개로) 세입자가 독일 민법상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주장을 인정
- 2019년 3월 베를린 지방법원 민사부는 원고인 임대인이 피고인 임차인 두 명에게 제기한 자가사용 목적을 위한 기존 세입자 임대계약 해지 소송의 항소를 기각
- 이 판결로 세입자는 고령을 사유로 임대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됨

의의

-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살던 주택에서 편법으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
 - 특히, 재판부가 세입자의 곤란한 상황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특별히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고령을 이유로 세입자의 권리를 소유권보다 우선해서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례
- 곤란한 상황의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필요
 - 베를린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
 - 베를린 세입자협회는 판결을 반기면서, 만 70세 이상 혹은 10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임대계약 해지통보는 곤란한 상황으로 여겨야 하며, 연방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의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를 더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주거난의 심화에 따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고령세입자 문제가 증가
 - 독일 세입자협회에 따르면, 매년 이와 같은 자가사용을 위한 임대계약 해지가 8만 건에 달한다고 함
- 독일 연방재판소(Bundesgerichtshof)는 이와 같은 상황에 사례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지난 5월 22일 45년간 한집에서 살아온 고령 세입자가 받은 자가사용을 위한 임대 계약 해지통보를 검토한 결과, 사건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세입자의 나이, 임대기간, 신체적·정신적 건강, 특히 이사가 세입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있지만, 세입자 보호의 범위는 확대
 - 세입자의 건강상태와 별개로 나이를 중시했던 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종합적인 판단과 함께 이사가 세입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는 결론
 - 특정한 나이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

<https://www.tagesspiegel.de/berlin/landgericht-berlin-alte-menschen-haben-besonderen-kuendigungsschutz/24093918.html>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19-03/landgericht-berlin-mietrecht-kuendigungsschutz-lebensalter>

<https://www.berliner-mieterverein.de/presse/pressearchiv/mieterverein-begruesst-landgerichtsurteil-zum-eigenbedarf-und-verlangt-eine-gesetzliche-klarstellung-pm1913.html>

<https://www.morgenpost.de/berlin/article216954383/Seniorin-wird-wegen-Eigenbedarfs-gekuendigt-Urteil-vertagt.html>

신 희 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이주민 도시정착 돕는 ‘어머니 사업’, 市가 운영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市의 ‘도시지역 어머니’(Stadtteilmutter) 사업은 이주민이 낯선 도시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주로 단기적인 지원에 의지해 사업이 불안정했음. 이에 따라, 시정부는 이 사업을 공식사업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규모를 베를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많은 이주민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배경과 개요

- 베를린 내 외국인의 정착과 생활이 주요 과제로 대두
 - 베를린은 독일의 도시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외국인이며, 32.5%는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음
 - 기존에도 터키인 등 외국인 비율이 높았지만, 난민의 유입과 도시 자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주민이 증가
- 이주배경의 어머니가 다른 이주가정 어머니에게 베를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도시지역 어머니’ 사업
 - 이주배경 가정의 어머니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자녀 양육, 교육, 건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업
 - 먼저 정착한 이주배경 어머니들이 일종의 지식 확대·재생산자의 역할을 함
 - 베를린에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
 - 주요 목표는 이주민 어린이와 부모의 언어능력 향상, 부모의 양육책임 지각을 촉진하고 격려, 보육시설(Kita) 소개와 방문 도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관계 개선, 지역교육 기관을 대하는 부모의 자신감 향상, 기타 관련 정보제공 등
- 이주배경이 같은 어머니가 관련 교육을 이수받은 다음 교육자로 활동
 - 부모교육과 언어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배낭에 교육자료를 넣어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배낭 프로그램으로도 불림
 -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같은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이 활동
 - 문화적 배경, 언어, 현재 생활 지역 등이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머니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형성

- 도시지역 어머니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다음과 같은 주제의 수업을 이수 받아야 함
 - 보육원과 학교, 언어 발달과 언어 지원(가족언어와 독일어), 아이의 발달단계(육체·운동·정신·사회적 측면), 건강한 식습관, 건강 관리, 중독 예방, 성교육, 폭력 없는 훈육, 미디어 사용법, 자연환경에 관한 교육, 스포츠·운동, 어린이 권리, 이웃가족 돕기, 어린이 사고 예방
- 2006년 베를린 노이쾰른주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 개신교 중심의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활동 단체인 디아코니베아크 노이쾰른-오버슈프레 협회(Diakoniewerk Neukölln-Oberspree e.V.)에서 시작
 - 베를린의 다른 일부 지역구와 에센, 도르트문트, 하노버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아버지 프로그램도 개발됨
 - 노이쾰른에서 터키계와 아랍계 출신의 여성 50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노이쾰른 내에서 12,000명의 대상자를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성공적으로 평가
 - 올해 4월 노이쾰른의 도시지역 어머니들은 여성건강상을 수상

주요 내용

- 베를린 이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인건비 등 사업운영자금이 불안정
 - 도시지역 어머니들은 2014년 기준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옴
 - 최근까지도 다양한 기금형태로 사업지원이 이뤄졌고, 주로 기간제 프로젝트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안정
 - 초기에는 자선단체 사업에서 확장되어 주 30시간의 단기 고용으로 시작
 - 2014년 연방노동중개청의 지원을 받아 최저시급으로 고용되었지만, 지원금이 삭감되며 고용불안이 발생하자 100여 명의 어머니가 항의시위를 벌임
- 도시지역 어머니 사업을 공립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자금 조달을 꾀할 계획
 - 2020년 1월 1일 새로운 공립 프로그램으로 시작할 예정
 - 현재 노이쾰른을 비롯해 일부 지구에서만 실행 중인 사업을 베를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됨
 - 가정방문뿐 아니라, 보육센터, 학교, 교육상담센터 등에서도 도시지역 어머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
 - 베를린 가족부 상원의원 산드라 쉬레즈(Sandra Scheeres)는 “이 의미있는 일에 사회보장직무의 성격을 가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의를 부여



[그림 1] 베를린 노이켈른의 도시지역 어머니들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817016.php>

<https://www.berlin.de/ba-neukoelln/aktuelles/bezirksticker/stadtteilmuetter-mit-dem-frauengesundheitspreis-2019-ausgezeichnet-803146.php>

<https://www.rtl.de/cms/senat-will-stadtteilmuetter-projekt-langfristig-sichern-4350746.html>

<https://www.rbb24.de/politik/beitrag/2019/06/stadtteilmuetter-berlin-senat.html>

<https://www.berlin.de/sen/wirtschaft/gruenden-und-foerdern/europaeische-strukturfonds/efre/projektbeispiele/artikel.367135.php>

<https://de.wikipedia.org/wiki/Stadtteilmutter>

<https://www.bz-berlin.de/berlin/mitte/stadtteilmuetter-kaempfen-um-ihre-jobs>

<https://www.diakoniewerk-simeon.de/beratung-integration/stadtteilmuetter-in-neukoelln/>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222@gmail.com

‘여성,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하반기 내 시행

인도 델리NCT / 사회·복지

인도 델리NCT(수도직할지) 정부는 여성이 지역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올 하반기 내에 실행할 계획임. 여성에게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 버스와 지하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더 많은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정책적 배경

- 기존 교통정책의 여성우대는 편의 제공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버스 앞쪽 좌석을 여성 지정석으로 제공
 - 지하철 첫 칸을 여성전용으로 지정하고 남성이 탑승할 때 벌금 250루피(4천 원)를 부과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이 외의 칸에는 일부 좌석을 여성 지정석으로 배정하여 우선권 부여
 - 기존 택시 서비스를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Uber)나 올라(Ola)가 대체하여 접근성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의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주요 교통수단인 공영버스의 일 평균 이용객 420만 명 중 여성은 20% 수준
 - 지하철 하루 평균 300만 명의 이용 고객 중 여성은 약 25%에 불과
 - 일부 취약계층 여성은 대중교통 비용 때문에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현상 발생
- 여성의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역설적으로 여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느끼는 위험함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악순환 발생
 - 남성고객 중심의 대중교통이 여성 이용객의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절감
 - 많은 여성이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 요구

주요 내용

- 2019년 6월 델리NCT 교통부 장관은 여성이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올 하반기 시행 예고

- 여성우대만을 목적으로 한 여성 대상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세계 최초
-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각계 부처가 협의하여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개발 중
- 지방정부는 무료화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예정
 - 무료화에 따른 비용 손실은 관련 기관에서 산출 중이며 협의 진행 중
-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구조적 한계의 해결책 마련 필요
 - 기존 법규에는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시행 전에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가 요구
 - 안내원이 있는 버스와 달리 지하철 무료탑승을 지원할 기술적 시스템 부족
- 정책 부작용 대비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설득도 필요
 - 무료화에 따른 대중교통 혼잡 증가로 교통인프라 부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재원 부족 문제, 남성 고객의 역차별 문제 등도 발생
- 여성 대중교통 무료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취약계층 여성이 교육·직업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여주어 사회진출을 도움
 - 여성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승하면, 여성을 위한 공간이 확대되어 위험 노출 감소
 - 더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른 공영교통 시스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 여성의 개인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여성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은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



[그림 1] 지하철 여성 전용칸



[그림 2] 지하철 여성 지정석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buses-metro-may-be-free-for-women-in-delhi/articleshow/69616049.cm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transportation/shipping/-transport/buses-metro-may-be-free-for-women-in-delhi/articleshow/69616309.cms>

<https://www.shethepeople.tv/news/delhi-metro-buses-might-free-women>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재생산·사회·경제 분야 여성정의 실천전략 제시

미국 뉴욕주 / 행정·교육

미국 뉴욕주는 작년부터 여성전담위원회(Council of Women and Girls)를 설치해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뉴욕주 여성전담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보고서에서 재생산·경제·사회의 3가지 영역에서 여성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배경

- 여성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여성권리 강화 정책 추진
 -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백악관 여성전담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f Women and Girls)가 해체되자, 뉴욕주는 2018년 주정부 차원에서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창설하여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
 - 여성(아동과 성인 모두)의 건강·안정·직장·가정생활 등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관련법 개정, 정책 제안,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
- 위원회 창설과 함께 여성의 권리·기회 등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 2018년 보고서에는 여성의 건강, 안전, 일터, 아동·청소년 중 여성의 영역별 현황과 필요한 정책 등을 수록
 - 2019년 보고서는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를 위해 실현되어야 할 3가지 정의(Justice)를 규정하고, 관련 어젠다를 제시
 - 3가지 정의는 각각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Reproductive Justice),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문제가 대부분 개인의 정체성(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

주요 내용: 2019 Women's Justice Agenda

-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
 - 출산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제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수정란 보존의 의료보험 적용 요구
 - 중·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의무화
 - 인종 간 산모사망률의 격차 줄이기

- 도서지역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산부인과 서비스 장려
 - 직장 내 모유수유권 보장
 - 임신·육아 중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 자궁섬유종, 자궁내막증, 유방암 등에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연구와 공공 프로그램 시행
 - 신생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면 캠페인 시행
- 사회적 정의
- 평등권 개정안 통과: 인종·성별·종교·신념·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가정폭력 생존자 정의 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감형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재판의 피고가 되었을 때, 그 행동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법이 정하는 수준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 가정폭력 예방의 새로운 모델 수립
 - 피해자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과거의 법을 없애고 주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화, 사이버폭력·데이트폭력·성착취 등의 정의와 처벌 기준 개선, 지속적인 법령의 개정 등
 - 성폭력 증거수집에 사용된 진단키트의 보관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 보복성 음란물 금지(Outlaw Revenge Pornography): 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 인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뉴욕주 모든 학교 학생으로 확대
 - 강제 성매매 피해자도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강간 피해자의 과거 성적경험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보호 대책 강화
- 경제 정의
- 뉴욕주 임금 평등법을 현대화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것
 -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TF 결성: 직장 내 인력 다양성, 임금평등 등 뉴욕주가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기업에서도 실현할 방안을 제안

- 어린이 보육 기반시설에 투자해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강화
- 가정역량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시행
 - 한부모 여성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돌보며 학업을 마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주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부모 여성에게 캠퍼스 돌봄, 맞춤형 상담, 개인교습, 커리어 카운슬링, 4년제 대학 편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안내 등을 지원
-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확대
 - 저소득층 위주로 과학기술(STEM) 수업, 로봇 공학, 개별교습, 체육활동 등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제공
- 컴퓨터공학 관련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 주정부 최초의 청소년협의회(Youth Council) 신설로 직업교육, 건강·보건 교육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상담, 보건, 범죄 관련 등)를 제공할 계획
- 여학생의 정부 진출을 장려하는 '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2019 - Girls in Government' 프로그램 시행
 -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공공분야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nsReport021919.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폭염 대비 사회연결망 강화·취약지역 우선 개선

미국 뉴욕시 / 환경·안전

미국 뉴욕시장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기후변화에 따라 강해진 폭염의 영향력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폭염대응 프로그램 'Cool Neighborhoods NYC'를 2017년 발표하고 시행 중임. 사회연결망을 강화해 폭염 시 이웃을 서로 돌보고, 상세한 폭염 관련 데이터를 파악해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지역사회와의 협조 아래 효과적으로 운영 중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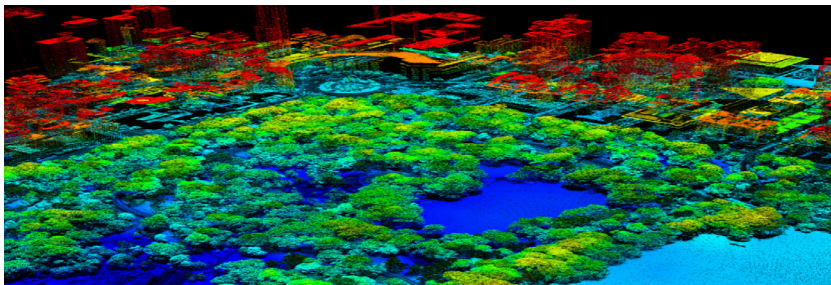
- 매년 여름마다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가 심각하고, 기온도 상승 중
 - 무더위는 열사병·탈수 등의 온열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영향
 - 열사병으로 연평균 450건의 응급실 방문, 150여 명 입원, 115명 사망자가 발생
 - 뉴욕시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까지 도시의 평균기온이 최대 5.7°F(3.16°C) 오르고, 최고기온이 90°F(32.2°C) 이상인 일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Cool Neighborhoods NYC 프로그램을 시행해 폭염에 대응
 - 더위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 기온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하고, 사회연결망을 강화하여 온열질환 피해 등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주요 내용: Cool Neighborhoods NYC 프로그램

- 도로 수목환경 조성으로 열섬현상 최소화
 - 버팔로 뉴욕 주립대와 협업하여 파악한 폭염에 취약한 지역(맨해튼 북부 사우스 브롱스와 중앙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도로 수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8,200만 달러(98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 NYC °Cool Roofs Program
 - 시멘트 옥상과 지붕과 같은 불침투성 표면이 열섬현상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되자, 2009년부터 민간과 협업하여 옥상을 흰색 페인트로 코팅하는 작업을 시작
 - 쿨루프 설치 시 실내 냉방비용을 10~30% 절약하는 효과 발생
 - 지역단체에 유상으로 신청하고, 폭염 취약지역에는 무상으로 제공

- 현재까지 400만 달러(48억 원) 넘게 투입해 670만 ft^2 (62만 2,450 m^2) 이상의 옥상을 코팅하여 2,680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데 이바지
- 또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연간 7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 중
-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친환경 도로 정비 작업
 - 열섬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도로를 옅은 색으로 처리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작업
- 가정건강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교육
 - 2008~2011년 사이 뇌졸중 사망 사건의 약 85%가 가정의 실내 고온으로 발생
 - 현장에서 노약자, 장애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건강도우미 업체와 연계해 폭염 대응법 등을 교육
- 이웃 돌보미 프로그램 ‘Be a Buddy NYC’
 -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공동체 유대 관계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이웃을 돌보는 프로그램
 - 이웃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자원봉사자를 육성
 - 지역사회 주도의 이웃 돌보미 프로그램에 93만 달러(11억 1,600만 원)를 투자
- 언론 매체 활용 강화
 -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 2011년 조사 결과, 에어컨이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50%는 폭염 기간에 실내에 있었고, 30%는 폭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
 - 열사병 경험자나 폭염 고위험군 거주자들은 TV 기상캐스터를 신뢰하고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 시 언론의 경고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시정부는 방송매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폭염정보 전달의 범위를 확대
-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설문 조사 결과 에어컨 설치·유지 비용 부담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의무화
 -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 일부에서 실내 환기에 필요한 창문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창문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 공공 냉방시설물 접근성 확대
 - 동사무소, 노인센터,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 수백 곳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폭염 시 무료로 개방하고 운영시간을 연장
 - 가정건강 지킴이나 이웃 돌보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피시설을 안내
-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 강구
 - 폭염의 영향력은 건물의 분포나 토양의 구성성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 수집과 실용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
 - 미기후와 폭염 취약지역을 동네 단위로 상세하게 파악하는 프로젝트에 30만 달러(3억 6천만 원)를 투입
 - 국립과학재단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지난 5년간 10개 도시의 기후 변화 관련 자연재해 데이터를 분석
 - 뉴욕 시립대와 연계해 고해상도 기상연구·예측 프로그램 개발
 - 뉴욕시의 복잡한 건물 분포도를 고려해 레이저 레이더(LiDAR)를 이용한 3차원 지도 데이터 구축에 172만 달러(20억 6,400만 원)를 투자
 - LiDAR 데이터로 폭염 취약지역을 파악해 녹지조성이 우선해서 필요한 지역 선정에 활용



[그림 1] 뉴욕시 LiDAR 지도 데이터 예시

https://www1.nyc.gov/assets/orr/pdf/Cool_Neighborhoods_NYC_Report_FINAL.pdf

<https://untappedcities.com/2017/06/27/cool-neighborhoods-nyc-launches-to-reduce-extreme-summer-heat-with-green-rooftops-and-trees/>

인도주행 금지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 시작

프랑스 / 도시교통

전동킥보드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프랑스 내무부는 최근 인도주행 금지, 제한속도 위반 시 벌금 부과, 동승 금지, 최소 운행연령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음.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규제를 시작할 계획

배경

-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장치 마련의 시급성
 - 인도 위 고속 주행, 보호장구 없이 차도 운행 등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위험하고 무질서한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인명사고 우려가 급증
 - 보르도 시내에서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이던 40대 남성이 운전미숙으로 넘어져 두부를 콘크리트에 강하게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례
 - 파리에서 7주 된 아기를 안은 엄마가 인도를 걷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시속 25km로 주행 중이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례
 - 보르도시는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사용행태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관련 법규 마련 전까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기도 함
 - 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전동킥보드는 현실적 문제로 단속하지 않음
 - 안전사고의 심각성이 크지만,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수요가 날이 다르게 늘고 있어 무조건적인 사용금지도 어려운 상황

주요 내용

- 프랑스 내무부와 각 지자체는 적절한 개인 전동이동수단 규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정
 - 정부가 큰 틀을 잡으면 지자체별로 상황과 사정에 맞게 규정을 조정·추가하여(제한속도, 벌금액수 등) 적용
 - 2019~2020년부터는 전동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 등의 개인 전동이동수단에 도로교통법을 적용
 - 이에 따라, 크게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개인 전동이동수단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

- 첫째, 인도 위 주행 금지
 -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조치로, 도로 위 최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 위반 시 벌금 135유로(17만 5,500원)
 - 해당 이동수단을 가지고 인도에 오를 때는 반드시 이동수단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끌고 도보로 이동
- 둘째, 제한속도 위반 시 1500유로(195만 원) 벌금
 - 도심에서 개인 전동이동수단 이용 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차도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함
- 셋째, 동승 금지와 최소 운행연령 제한
 - 개인 전동이동수단은 반드시 일인승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 시 35유로(45,500원)의 벌금 부과
 - 운전자의 최소 연령은 12세 이상으로 제한
 - 헬멧 착용 의무화, 개인 전동이동수단에 전조등·후미등 반드시 탑재
 - 주차 시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하며, 위반 마일리지 적용

향후 방향과 계획

-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예정
 - 특히, 주차문제는 많은 개인 전동이동수단 대여서비스 업체가 별도의 대여소나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각자 알아서 인도 등에 세워 두고 떠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전용도로 주행 여부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할 예정

<https://lifestyle.boursorama.com/automobile/trottinettes-electriques-les-nouvelles-regles-a-connaître/amp/>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trottinettes-et-velos-en-libre-service-une-charte-pour-mieux-les-encadrer-dans-la-metropole-1558686352>

<https://www.sudouest.fr/2019/05/27/bordeaux-de-nouvelles-regles-pour-les-loueurs-de-velos-scooters-et-trottinettes-en-libre-service-6132981-2780.php>

<https://www.boursorama.com/actualite-economique/actualites/redevance-limitation-stationnement-bordeaux-edict-e-ses-regles-pour-les-trottinettes-et-deux-roues-en-libre-service-a404db2ded8579ac0bc3311e2130227f>

<https://fr.euronews.com/2019/05/17/une-nouvelle-legislation-pour-encadrer-l-usage-des-trottinettes-electriques>

‘99년간 사용’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미국 하와이주 / 도시계획·주택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 심화가 예상되는 미국 하와이주는 최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후 99년간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알로하 홈즈’(ALOHA Homes) 사업을 추진 중임. 20개의 초고층 빌딩에 총 6만 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게 일부를 우선 제공한 뒤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판매할 계획

배경

- 인구증가로 2025년까지 6만 5천 채의 주택부족이 예상, 부동산 가격도 상승 중
 - 2015~2025년 인구증가 전망에 따르면, 65,000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 이른 시일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수의 주거빈곤층 발생 우려
 - 하와이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148만 명 중 96만 명)가 거주하는 오아후(Oahu) 섬의 주택 가격이 2018년보다 2% 이상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
 -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저가주택의 필요성은 하와이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많은 주민이 주택문제로 다른 주로의 거주지 이동을 고민한 적이 있음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스탠리 창(Stanley Chang) 주 상원의원은 일명 ‘알로하 홈즈’로 불리는 공공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 중
 - ‘ALOHA’는 ‘Affordable Local Owned Homes for All’의 약자
 -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을 통과해 6월 현재 하원에 계류 중
 - 미국 내에서는 하와이 정도의 규모에서 주택부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사례를 찾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 싱가포르와 비엔나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힘
 - 싱가포르 인구의 80%는 정부가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
 - 비엔나는 ‘사회적 주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주택의 1/4은 도시정부가 소유

주요 내용

- 2025년까지 6만 5천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
 - 주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에 초고층 빌딩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20개를 건설할 예정
 - 1차로 3천 채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 총 6만 5천 채를 공급

- 초고층 빌딩으로 지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공급가격을 낮출 계획
- 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며, 편의시설도 마련
 -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처럼 임대주택 200채당 1곳의 수영장, 정원, 실외 바비큐 파티장, 테니스코트, 옥상정원, 소매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 예정
- 99년간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
 -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진 채, 임대주택의 사용권만 99년 만기로 판매
 - ‘알로하 홈즈 자치단체’(AloHA Homes Authority)를 설립해 자금조달·건설 사업·사용권 판매 등을 위임할 예정
 - 1채당 30만 달러(3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
 - 하와이주 주택 평균 거래가격인 42만 5천 달러(5억 1천만 원)나 오아후시 단독 주택 평균 거래가격인 80만 5천 달러(9억 6,600만 원)에 견줘 매우 낮은 가격
 - 다만, 30만 달러의 납부방식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정부는 납부 방식과 기간은 앞으로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저소득층에게 3천 채를 우선 제공 후 무주택자에게 공급
 - 3천 채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에게 판매
 -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소득 기준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소득 9만 6,400달러(1억 1,568만 원)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
 - 저소득층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와이 거주자라면 고소득층도 구매할 수 있지만, 주택 소유자는 안 됨



[그림 1] 알로하 홈즈 예정부지로 거론되는 맥컬리 커뮤니티 전경



[그림 2] 알로하 홈즈 예상도

-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
 - 임대주택의 재임대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주택 사용권을 강제로 판매

-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지만, 1차 매수 상대자는 알로하 홈즈 자치단체가 될 것
 - 또한, 사용권 판매 차액의 75%를 주정부가 회수
- 임대주택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 등으로 권리를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상속자에게 사용권이 상속
 - 다만, 해당 상속자가 적격 사용자가 아닐 때는 그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음

찬반 의견

- 하와이와 싱가포르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강한 편
 -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월 소득의 약 20%를 정부가 운영하는 의무저축 프로그램에 납입하여 주거·의료·자녀교육·은퇴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 중
 - 하지만, 하와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으며 주민 거부도 강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는 토지부족이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하와이는 전체 섬 면적 중 단 5%만을 주택개발 가능 지역으로 설정 중
 - 때문에, 주택개발 가능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정부주도의 정책보다는, 세금감면 등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알로하 홈즈가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
- 하와이주지사 데이비드 아이지(David Ige)는 알로하 홈즈 정책을 적극 지지
 - 하와이 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매우 경제적인 사업이라고 평가

<https://www.facebook.com/pg/ChangforSenate/posts/>

<https://www.kitv.com/story/39499052/senator-stanley-chang-to-propose-bill-he-says-could-aid-hawaii-housing-crisis>

<https://www.grassrootinstitute.org/2019/01/singapore-model-doesnt-sing-for-hawaii-housing/>

<https://www.hawaiinewsnow.com/2019/03/16/ambitious-affordable-housing-proposal-touts-condos-with-year-leases/>

<https://www.capitol.hawaii.gov/memberpage.aspx?member=chang>

<https://nextcity.org/daily/entry/hawaii-state-senator-goes-to-singapore-for-housing-inspiration>

<https://downwithtyranny.blogspot.com/2018/11/aloha-homes-guest-post-by-state-senator.html>

<https://www.civilbeat.org/2018/11/looking-to-singapore-for-answers-to-honolulu-housing-crisis/>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58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6월 17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